

말레이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신민금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Tel: 044-414-1169)

신민이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lshin@kiep.go.kr, Tel: 044-414-1154)

차례

1. 머리말
2. 신정부의 공약과 주요 경제정책
3. 신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및 전망
4.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주요 내용

- ▶ 2018년 5월에 개최된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며 마하티르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경제정책의 큰 변화가 예고됨.
 - 1980~90년대 산업화를 주도했던 마하티르 총리의 정계 복귀로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공공부채, 중진국 함정, 산업다각화 지연 등 위기상황을 타개해 성장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됨.
- ▶ 마하티르 신정부는 공공부채 감축, 민생 부담 경감, 제도개혁, 실용주의에 입각한 대외경제정책 추진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함.
 - 정부는 공공부채 감축을 위해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중단, 지출 삭감 등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GST 폐지, 연료보조금 부활 등을 통해 민생 부담을 경감하고, 부정부패 방지, 총리 권한 축소, 경제 전반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혁에 기반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신정부는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 축소 및 대일본 경제협력 확대, 아세안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함.
- ▶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개혁 및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나, 고소득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 육성전략 및 성장 촉진 계획은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순조로운 총리직 이양 및 정책적 일관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동방정책 부활을 통한 교육·과학기술 분야 대일본 경제협력 강화, 신규 자동차 브랜드 육성, 대중국 경제의존도 축소 등 경제 및 산업 정책 기조가 나타나나, 구체적인 산업 육성전략은 미비함.
 - 정부가 공공부채 감축과 포퓰리즘 공약 이행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임.
- ▶ 마하티르 신정부 출범으로 실리에 기반한 균형 외교정책 추진, 아세안 중심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동방정책 재할성화, 내수 회복 등이 예상되는데,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및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근간으로 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신정부가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여타 동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 과거 서방 선진국이 아닌 동아시아 국가(한국, 일본)를 경제성장 모델로 삼은 점 등은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남중국해 영토분쟁 심화에 따라 아세안 중심성이 약화되었는데, 아세안 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마하티르 총리의 정계 복귀로 아세안 중심성 및 동아시아 역내 다자협력 강화가 기대됨.
 -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아세안과 인적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교육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유사한바, 정상급 교류를 통해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주요 자원공급처, 건설시장, 중동진출 교두보 측면에서 중요하며, 대말레이시아 협력전략 수립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GST 폐지, 연료보조금 부활 등 신정부의 공약 이행으로 내수 회복이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은 고급 소비재, 할랄식품 분야 진출을 검토할 수 있음.

1. 머리말

■ 2018년 5월에 개최된 총선에서 61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며 마하티르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경제정책의 큰 변화가 예고됨.

- 2018년 5월 9일 개최된 총선에서 마하티르 총리(Mahathir Mohamad)가 이끄는 4개 정당연합인 희망 연대(PH: Pakatan Harapan)가 전체 의석 222석 중 113석(의석의 50.9%)을 확보하여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함(표 1 참고).¹⁾
- 정권교체 배경으로는 △ 국영투자기업 1MDB를 둘러싼 나집(Najib Razak) 전 총리의 수조 원대 비리스캔들 확산에 따른 반감 고조 △ 물품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2015. 4)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악화 △ 22년간 총리로서 경제성장을 주도한 마하티르 총리에 대한 기대감 등을 들 수 있음.

표 1. 제14대 말레이시아 총선 결과

정당	구성	의석수(석)	의석비율(%)
PH	4개 정당연합 (PKR, DAP, PPBM, AMANAH)	113	50.9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	13개 정당연합 (UMNO, MCA, MIC 등)	79	35.6
PAS	-	18	8.1
기타	-	12	5.4
합계	-	222	100.0

자료: The Star, <https://election.thestar.com.my>(검색일: 2018. 6. 27).

■ 과거 산업화를 주도했던 마하티르 총리의 정계 복귀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공공부채, 중진국 함정, 산업다각화 지연 등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성장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국제사회가 주목함.

- 공공부채 문제에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며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1980~9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마하티르 총리의 재집권으로 말레이시아 경제가 다시 회복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말레이시아는 생산성 향상 지연, 제조업 관련 자체 기술력 부족 등 요인에 따라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음.
- 말레이시아는 원유, 가스 등 광업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유가 하락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부가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육성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부진함.
 - 원유 및 가스 수출국인 말레이시아 경제는 2014년 하반기 본격화된 유가 하락으로 2015~16년에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됨(그림 1 참고).²⁾

1) 마하티르 총리는 1981~2003년에 22년간 총리로 재직하며 말레이시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주도,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동시에 '개발독재자'로 비난받기도 하는 인물임. 마하티르 총리는 15년 전 총리직 사임 후 정계에서 물러나 있었으나, 나집 전 총리의 1MDB 비리스캔들이 터지자 정계에 복귀, 총리 퇴진 운동을 주도했음. 마하티르 총리는 범야권연대를 형성해 총선에 도전, 정권교체에 성공함.

2) 광물성연료(HS-27) 수출 비중: 15.1%(2017). KITA 무역통계(검색일: 2018. 7. 1).

그림 1. 말레이시아의 실질 GDP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IHS Markit(검색일: 2018. 7. 1).

■ 이에 본고에서는 독립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를 맞이한 말레이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및 주요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경제 전망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 정부의 공약 및 발표에 기초하여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경제정책을 분석함.
- 그리고 막대한 규모의 공공부채, 낮은 생산성, 중진국 함정 등 말레이시아 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감안하여 신정부의 주요 정책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경제 및 정책 방향을 전망함.
-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2. 신정부의 공약과 주요 경제정책

가. 신정부의 최초 100일 내 실현 10대 공약과 장기추진 60대 공약

■ 정부는 단기적으로 GST 폐지, 연료보조금 부활, 최저임금 단일화 및 인상 등 서민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취임 100일 이내 이행 10대 공약’ 실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함(표 2 참고).

- 10대 공약 중 GST 폐지 공약은 총선을 승리로 이끈 핵심 공약임.
- 정부는 10대 공약에 따라 외국기업이 수주한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를 재검토 중임.
 - 나집 전 총리 재임시절 중국기업이 도로, 철도, 항만, 부동산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한바, 이 공약은 중국 정부기관 및 기업이 주요 타겟이라고 볼 수 있음.
 - 마하티르 총리는 공공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제성, 1MDB 비리 스캔들과의 연관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경제성이 낮거나 비리와 연루된 프로젝트는 중단 조치함.

표 2. 취임 100일 이내 이행 10대 공약(10 Promises in 100 Days)

구분	공약	구분	공약
1	GST 폐지	6	월 소득 4,000링깃(약 1,000달러) 미만 졸업생에 대해 학자금대출(PTPTN) 상환 유예
2	특정 집단 대상 연료보조금 부활	7	부패 연루 기관(1MDB, Felda, MARA, Tabung Haji) 조사 및 거버넌스 개혁
3	Felda 이주민 부채 탕감	8	「Malaysia Agreement 1963」 이행위원회 설립
4	전업주부 대상 EPF(Employees Provident Fund) 도입	9	소득 하위 40% 계층에 등록 사립병원 이용 시 보조금 500링깃 지급
5	전국 최저임금 단일화 및 인상	10	외국기업이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재검토 실시

자료: PH(2018), *Buku Harapan: Rebuilding Our Nation Fulfilling Our Hopes*, p. 14.

■ 신정부가 5년 내 달성할 것을 약속한 장기추진 선거공약은 크게 5대 분야와 분야별 세부 공약 총 60개로 구성됨(부록 표 참고).

- 5대 분야는 ① 민생 부담 경감 ② 제도·정치 개혁 ③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경제성장 촉진 ④ 사바주(州) 및 사라왁주(州) 권한 및 지원 확대 ⑤ 포용적이며,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국가 건설이며, 이 중 경제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는 민생 부담 경감,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경제성장 촉진 분야임(표 3 참고).³⁾
- 신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 및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 등 요인으로 민생이 악화된 점을 의식해 ‘민생 부담 경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경제성장 촉진’ 분야의 주요 경제 관련 공약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부미푸트라 지원, 투자 촉진·사업 및 무역절차 간소화, 서민 소득 증대 등이 있음.
 - 마하티르 정부는 교육의 질 개선, 혁신 및 지재권 상업화 지원, 규제 간소화 등 조치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 및 외교 정책을 활용해 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고자 함.
 - 신정부는 전국 최저임금 단일화 및 인상(월 1,500링깃, 약 370달러), 외국인 노동자 규모 감축(600만 명 → 400만 명), 양질의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등을 통해 서민 및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꾀함.

표 3. 신정부의 장기추진 60대 공약 중 경제 관련 주요 공약

분야	경제 관련 주요 공약
민생 부담 경감	- GST 폐지, 판매용역세(SST: Sales and Services Tax) 부활 - 연료보조금 부활(125cc 미만 오토바이 및 1,300cc 미만 차량 소유주 대상) - 물가 상승 억제 - 사회보장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한 보다 공평한 부의 분배 - 적정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경제성장 촉진	- 보다 견고한 경제발전을 위해 부미푸트라를 포함한 전 국민 지원 - 사업 및 무역절차 간소화, EU 등 국가와 양자협상 통해 신규 시장 발굴, 투자 유치 활성화 -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통해 다수의 소득 증대 - 서민 및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 시스템 도입(중산층 개인소득세 및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자료: PH(2018), *Buku Harapan: Rebuilding Our Nation Fulfilling Our Hopes*, pp. 16-91.

3) 동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사바주(州), 사라왁주(州)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한 지역임. (5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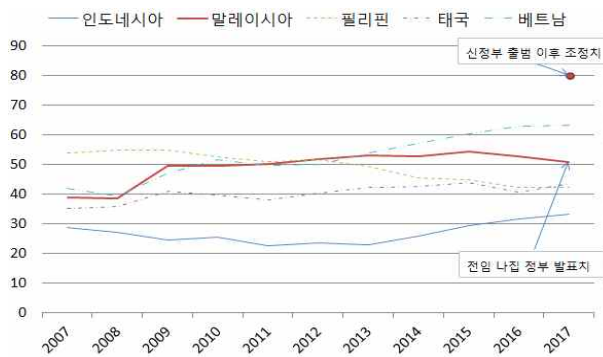
나.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 신정부는 최근 논란으로 부상한 공공부채 감축, 서민 생활부담 경감, 제도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균형적인 대외경제정책 추진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함.

- 신정부 취임 이후 공공부채 규모가 전임 나집 정권에서 발표한 수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1조 링깃(약 2,514억 달러, GDP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경제안정을 위해 공공부채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함(그림 2 참고).
- 전임 나집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채 규모는 2017년 말 기준 약 6,868억 링깃(약 1,730억 달러, GDP의 약 51%)으로, 정부의 GDP 대비 공공부채 상한선인 55%를 하회함.
- 나집 전 총리 재임시절 GST 시행(2015. 4)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수십 년에 걸친 장기집권으로 정경유착이 심화되고 경제 전반의 투명성이 악화됨.⁴⁾
- 마하티르 총리는 최근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심화된 점을 우려해 균형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그림 2. 말레이시아와 동남아 주요국의 공공부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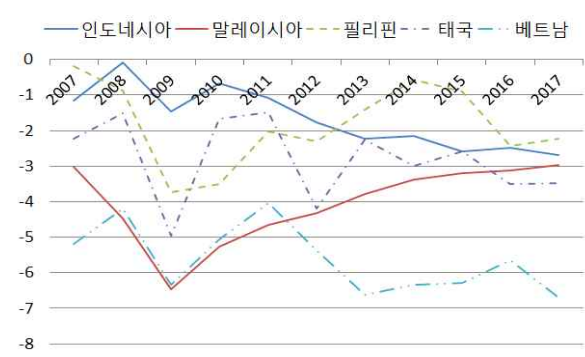
(단위: %/GDP)



자료: EIU(검색일: 2018. 7. 27).

그림 3. 말레이시아와 동남아 주요국의 재정수지 비교

(단위: %/GDP)



자료: EIU(검색일: 2018. 7. 27).

■ [공공부채 감축] 마하티르 신정부는 공공부채 감축을 위해 경제성이 낮은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중단 선언, 지출 축소, 희망펀드(Tabung Harapan Malaysia) 설립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를 중점 추진 중임.

- 신정부는 전임 정부가 추진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관련 낮은 경제성, 과도한 공사비용, 불공정한 계약조건 등 문제점을 인식, 외국기업이 수주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경제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해 중단·축소 조치를 발표했고, 일부 계약조건이 불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추진할 예정임(표 4 참고).
- 정부는 2018년 5월 말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고속철 건설사업과 MRT 3호선 건설사업, 2018년 7월 동해안철도(ECRL: East Coast Rail Link) 건설사업 등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중단을 선언함.

4) 기존 SST(5~10%)는 기업이 부담하는 'single-stage tax'이나, GST(6%)는 부가가치 창출 단계별로 부과되는 'multi-stage tax'로 최종 소비자도 세금을 부담함. 연승환(2018), 「말레이시아, 6월 1일부터 GST(재화용역세) 세율 0%로 변경」, kotra 해외시장뉴스.

-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고속철 건설사업은 2013년 10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양국 정상이 추진 합의한 이후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사업으로 중국, 일본, 유럽 국가, 한국 등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였음(그림 4 참고).⁵⁾⁶⁾
- 동해안철도 건설사업은 중국이 일대일로로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완공 시 말라카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말레이반도를 가로질러 물류 운송이 가능해져 중국 입장에서 물류비 절감은 물론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업임(그림 5 참고).
- 재무부 장관은 철도차량 구매수량 축소, 역사 개수·규모 축소,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통해 LRT 3호선 건설사업(37km) 공사비용을 316.5억 링깃(약 78억 달러)에서 166.3억 링깃(약 41억 달러)으로 47% 삭감함(2018. 7. 12).⁷⁾
-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 장관 임금 삭감, 불필요한 운영지출 축소 등을 통해 정부지출을 줄이고자 함.
- 마하티르 총리는 2018년 5월 30일 희망펀드를 설립, 부채 상환을 위한 대국민 모금운동을 시작함.

표 4. 신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요 내용	사업비	비고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고속철 건설사업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연결 고속철, 총 연장 약 350km	1,100억 링깃 (약 271억 달러)	· 2026년 완공 목표
MRT 3호선 건설사업	쿠알라룸푸르 내 전철 건설, 총 연장 약 40km	400억 링깃 (약 99억 달러)	· 2017년 10월 정부 승인 · 2025년 완공 목표
동해안철도 건설사업	Tumpat~Port Klang 연결 철도, 총 연장 약 688km	557억 링깃 (약 137억 달러)	·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CCCC) 수주 · 2017년 8월 착공 · 자금조달: 중국수출입은행 차관 85%(이자율 3.25%), 나머지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슬람채권(Sukuk) 발행 통해 조달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사업 2건	-	94억 링깃 (약 23억 달러)	· 중국 수주

자료: 언론자료 종합.

그림 4.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고속철 노선



자료: The Straits Times(2016), "Singapore-KL high-speed rail: An Interactive guide." (Dec 15)

그림 5. 동해안철도 노선



자료: Shannon Teoh(2017), "East Coast Rail Link: Malaysia touts rail trade route as rival to Singapore," *The Straits Times*. (Aug 10)

5) Myhsr 홈페이지, <http://www.myhsr.com.my/kl-sg-hsr/project-overview>(검색일: 2018. 7. 1).

6) 한국정부도 민관 합동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상부 사업단' 발족(2017. 1) 및 정상급 교류를 통해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고속철 건설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음.

7) CK TAN(2018), "Malaysia to halve cost of key rail project in infrastructure review," *Nikkei Asian Review*. (July 12)

■ [생활부담 경감] 정부는 GST 폐지, 연료보조금 부활 등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재무부는 총선 개최 일주일 만인 5월 16일에 총선을 승리로 이끈 핵심 공약인 GST 폐지를 선언함.
- 이에 따라 2018년 6월 1일부터 GST 세율이 6%에서 0%로 변경되었고, 정부는 GST 대체 세원 발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GST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며, SST는 9월 1일부터 부활할 예정임.⁸⁾
- 정부는 2018년 6월 7일에 주요 총선 공약인 연료보조금 부활 조치를 시행함.
- 전임 나집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목적으로 2014년 11월에 연료보조금을 폐지했으나, 이후 연료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됨.
- 연료보조금 부활에 따라 옥탄가(RON) 95 등급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2.2링깃(약 0.54달러), 2.18링깃(약 0.54달러)으로 고정되었고,⁹⁾ 정부는 2018년 연료보조금 부문에 약 30억 링깃(약 7억 4,60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함.¹⁰⁾

■ [제도개혁] 신정부는 부정부패 방지, 총리 권한 축소, 정부조달·입찰·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 관련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말레이시아는 그간 여당의 장기집권에 따른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 확산, 부정부패 심화로 국가 경쟁력 향상이 저해된바, 신정부는 정치권의 경제 개입을 줄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함.
-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발표한 정실자본주의지수(Crony Capitalism Index)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말레이시아는 조사대상 국가 중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실자본주의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¹¹⁾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2017년 기준 전체 180개국 중 쿠바와 동일한 62위를 기록했으며, 최근 1MDB 비리 스캔들 확산으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함(2014년 51위, 2015년 54위, 2016년 55위).¹²⁾
- 마하티르 정부는 총리 권한 축소 및 주정부 권한 확대,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MACC) 개혁 및 자율성 강화, 사법기관 신뢰 회복, 정부연관기업(GLC) 거버넌스 개선, 예산 집행 투명성 확대 등 제도개혁을 통해 전반적인 투명성을 제고하고 총리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자 함.
- 공약집에 따르면 신정부는 총리 임기 제한(중임만 허용), 총리실 소속 장관 규모 축소, 예산 삭감, 총리실 산하기관 축소 및 유관 부처로 이관, 총리 견제장치 마련 등을 통해 총리실 권한을 줄이고자 함.¹³⁾
- 정부는 이사회 보수 공개, 정치가 아닌 성과·전문성 기반 이사회 임명 등을 통해 정부연관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한편, 대중교통, 복지, 농업,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양하고자 함.¹⁴⁾
- 신정부는 정부조달, 입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과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 시 재무부 주도로 경제성을 검토하고자 함.¹⁵⁾

8) GST 세율만 0%로 변경되었을 뿐 기업들은 세금계산서, 소득신고서 등 서류 신고를 기존 방식대로 진행해야 함.

9) World Bank(2018), *Malaysia Economic Monitor June 2018: Navigating Change*, p. 29.

10) Jason Ng and Gho Chee Yuan(2018), "Malaysia brings back fuel subsidy to cushion consumers," *Nikkei Asian Review*. (June 7)

11) Economist 홈페이지, http://infographics.economist.com/2016/Cronyism_index(검색일: 2018. 7. 1).

12) Transparency International 홈페이지, <https://www.transparency.org>(검색일: 2018. 7. 1).

13) PH(2018), *Buku Harapan: Rebuilding Our Nation Fulfilling Our Hopes*, p.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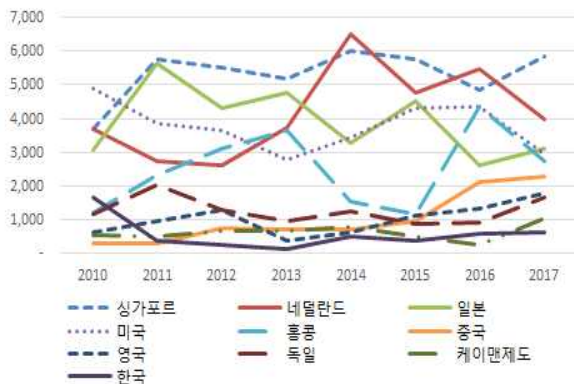
14) *Ibid.*, p. 54, p. 58.

15) *Ibid.*, p. 56.

■ [균형적인 대외경제정책 추진] 신정부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대중국 협력 추진 및 대일본 경제협력 확대,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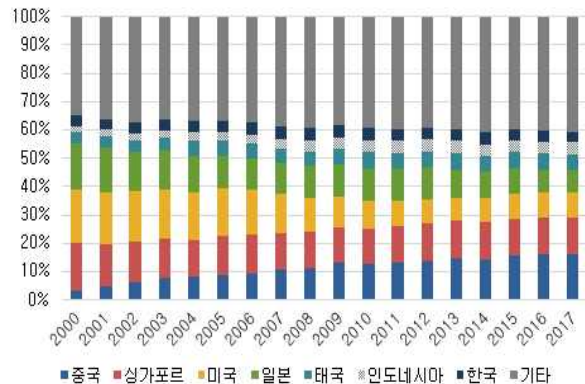
- 마하티르 총리는 자국 내 중국이 주도하는 인프라,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채무 급증, 중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 유입 증가 등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나,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해 실리에 기반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 중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는 1MDB 비리스캔들이 터진 직후인 201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함(그림 6 참고).
- 2009년 기준 중국은 싱가포르, 미국, 일본을 제치고 말레이시아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2017년 기준 대중국 교역 비중은 16.4%에 달함(그림 7 참고).¹⁶⁾

그림 6. 주요국별 대말레이시아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2017년 FDI 유입액 기준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10위 투자국임.
자료: CEIC(검색일: 2018. 7. 6).

그림 7. 말레이시아의 주요국별 교역의존도 추이



주: 2017년 기준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7대 교역대상국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7. 6).

- 총리는 2018년 6월에 국제콘퍼런스 참석차 일본을 방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지식, 기술, 노동 윤리 습득을 골자로 하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부활시켜 일본과 교육, 인적자원,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동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가 미국, 유럽 등 서방 선진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1982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공무원 연수, 유학생 초청, 기술훈련 등 인적자원개발 분야 관련 협력이 주를 이룸.
- 총리는 일본에 엔차관 및 철도 보수 관련 지원도 요청했으며, 일본과 협력하여 신규 자동차 브랜드 육성을 희망한다는 의사도 밝힘.
- 마하티르 총리는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아세안을 중심으로 독립적이고 원칙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아세안 국가가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지지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큼.¹⁷⁾

16) UN Comtrade(검색일: 2018. 7. 6).

17) CPTPP는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이후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브루나이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으로 2018년 3월에 출범했으며,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협상을 진행 중인 무역협정임.

- CPTPP와 관련하여 마하티르 총리는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에 대한 시장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협상조건 재검토 희망 의사를 밝힘.¹⁸⁾
- 총리는 일본에서 개최된 제24차 ‘아시아의 미래 국제콘퍼런스’에서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중국, 미국 등 강대국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목표로 ‘동아시아경제공동체(East Asia Economic Caucus)’의 필요성을 강조함(2018. 6. 11).¹⁹⁾

3. 신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및 전망

가. 신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 공공부채 문제 확산으로 금융시장을 포함한 경제 전반 불안정성이 확대된바, 공공부채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점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대외 신뢰도 회복 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재무부의 공공부채 수치 발표(2018. 5. 22) 이후 투자자금 유출이 심화되며 주가(KLCI)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신용위험도를 나타내는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으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책 발표로 금융시장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음.
- 공공부채 발표 이후 하락하던 주가가 2018년 7월 말 기준 연초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CDS 프리미엄도 7월 초 이후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냄(그림 8, 9 참고).

그림 8. 말레이시아 주가 및 환율 변화(2018. 1. 2~7. 26)



주: 2018년 1월 2일=100 기준.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8. 7. 26).

그림 9. 말레이시아 CDS 프리미엄 추이(2018. 1. 2~7. 26)



주: CDS 5년물 프리미엄임.
자료: Bloomberg(검색일: 2018. 7. 26).

- 다만 공공부채 문제가 중점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부채 감축과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 이행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18) Reuters(2018), "Malaysia's Mahathir calls for review of Trans-Pacific trade pact." (June 9)

19) Shotaro Tani and Masayuki Yuda(2018), "Mahathir revives 'Look East' policy to join ranks of economic giants," *Nikkei Asian Review*. (June 11)

-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GST 폐지, 연료보조금 부활 등 조치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는 정부의 GST 폐지 조치에 대해 석유 부문에 대한 세수 의존도 증가, 세수 기반 축소 등이 우려되며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 없이는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평가함.
 - GST 폐지 조치에 대해 세계은행(WB)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SST 부과대상 확대, 개인소득세 부과대상 확대, 기존 세제혜택 재검토, 조세행정 효율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함.²⁰⁾
- 정부가 조세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GST를 폐지함에 따라 세수 부족분 충당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GST로 인한 세입은 2016~17년 평균 연방정부 세입의 19.8%에 달하는 반면, SST를 통한 조세수입은 2010~14년 평균 연방정부 조세수입의 7.5%에 불과한바,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지출 삭감, 추가 세원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²¹⁾
- 국제유가가 상승 국면이어서 정부는 석유 부문 세입 및 배당금 증가, 불필요한 지출 축소 등을 통해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조치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마하티르 정부가 △ 인종, 성별 등과 관계없이 전문성, 다양성에 기반해 내각을 임명한 점 △ 전직 고위관료, 기업인, 개혁 성향 경제학자 등을 중심으로 현인회(EPG: Eminent Persons Group)를 구성한 점 등은 정부의 개혁,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냄.

- 그간 내각은 말레이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신정부는 장관급 인사에 중국계, 인도계 등 비말레이계 인재를 다수 등용했고, 특히 핵심 부처인 재무부 장관에 중국계 인사를 임명함.
- 신정부는 여당연합 측 주요 인사들이 집권 경험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출범 직후 전 중앙은행장, 전 재무부 장관, 기업인, 개혁 성향 저명 경제학자 등 경제 분야 전문가 총 5인으로 구성된 현인회를 발족함 (표 5 참고).
- 현인회는 신정부 출범 100일간 제도개혁 방향, 공공부채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임.
- 특히 정부가 말레이시아 최대 부호이자 화교로 중국 고위급 인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진 로버트 쿠옥을 임명했다는 점은 경제회복을 위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냄.

표 5. 현인회 인사 소개

구분	이름	주요 경력 및 특징
1	다임 자이누딘 (Daim Zainuddin)	· 전 재무부 장관(1984~91년) · 1980년대 중반 경기침체,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 극복에 기여
2	제티 아크타 아지즈 (Zeti Akhtar Aziz)	· 전 중앙은행장(2000~16년) · 은행 구조조정 단행, 이슬람금융산업 육성
3	하산 마리칸 (Hassan Marican)	· 전 페트로나스 사장(1995~2010년) · 페트로나스 사업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석유화학산업 육성

20) Ibid., p. 37.

21) World Bank(2018), *Malaysia Economic Monitor June 2018: Navigating Change*, p. 36.

구분	이름	주요 경력 및 특징
4	로버트 쿠옥 (Robert Kuok)	· 말레이시아 최대 부호, 화교 · 케리그룹 회장, 샹그릴라호텔그룹 회장 ·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고위급 인사와 긴밀한 관계
5	조모 콰메 순다람 (Jomo Kwame Sundaram)	· 개혁 성향 경제학자, 말레이시아 정치경제 전문가 · 전 UN 경제사회국(UN DESA) 사무차장

자료: CK TAN(2018), "Meet the 5 brains behind Malaysia's Mahathir-nomics," *Nikkei Asian Review*. (May 23)

■ 말레이시아 경제의 현안 이슈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중진국 함정 탈피이나, 공약집 및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고소득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업 육성전략과 성장 촉진 계획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말레이시아의 외자 유치와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저비용 생산국의 등장에 따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임.
- 마하티르 전 총리는 1991년에 제6차 말레이시아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고소득국 진입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비전인 'Vision 2020'을 발표함.
 - 전임 나집 정부는 'Vision 2020' 달성을 위해 제11차 말레이시아계획(11MP: Eleventh Malaysia Plan 2016-2020)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충, 제조업 제품군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화, 이슬람금융·생태관광·ICT·창조산업·할랄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강조한 바 있음.
- 마하티르 총리 인터뷰에서 동방정책 부활을 통한 교육, 과학기술 분야 대일본 경제협력 강화, 신규 자동차 브랜드 육성, 대중국 경제의존도 축소 등 경제 및 산업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산업 육성전략은 발표되지 않음.²²⁾
- 전임 나집 정부는 고소득국 도약을 위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최첨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마하티르 신정부는 갓 출범한 상태로 아직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하지 않음.
 - 전임 나집 정부는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8년 2월에 '4차 산업혁명 정책 기본틀 초안(Draft: National Industry 4.0 Policy Framework)'을 발표했고, 연내에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었음.

■ 부미푸트라정책 지속 외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레이시아의 투자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부미푸트라 기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부미푸트라 중소기업 육성안 등이 공약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투자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부미푸트라정책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말레이계 우대정책으로, 말레이계에 대해 기업 지분율 30% 할당, 국영공사 입찰·은행 대출·공공주택 분양 시 말레이계 우대, 공립학교 입학정원 할당 등이 포함됨.²³⁾
 - 위 정책이 두뇌유출, 국가 경쟁력 저하, 인종 역차별 등 많은 논란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인종을 구성

22) CK Tan and Takashi Nakano(2018), "In his own words: Mahathir Mohamad speaks to the Nikkei Asian Review," *Nikkei Asian Review*. (June 11)

23) 부미푸트라라는 말레이계 및 원주민을 뜻함. 말레이시아 인종 구성 비율은 말레이계 68.6%, 중국계 23.4%, 인도계 7% 등으로(2016) 말레이계가 다수를 이루나, 중국계가 경제를 장악함에 따라 1969년 말레이계를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남. 이에 정부가 1970년대 초부터 인종 간 소득격차 축소를 목표로 말레이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부미푸트라정책을 시행한 이후 해당 정책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하는 말레이제가 주요 정치기반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음.

- 신정부는 공약집을 통해 최저임금 전국 단일화 및 인상 계획을 밝혔으나, 2018년 7월 기준 월 최저임금이 920~1,000링깃인 점을 감안할 때 인상폭(50% 이상)이 지나치게 크며, 이는 기업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²⁴⁾
- 신정부는 2018년 8월경에 새로운 최저임금을 발표할 예정임.

■ 외자, 특히 중국자본 유입 확대에 경제 및 안보 주권 침해 우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이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재검토한 것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중국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음.

- 신정부가 중국이 수주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한 조치는 외형적으로는 수익성 악화와 재정 부담 축소가 목적이거나, 중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 유입 확대에 대한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함.
- 중국의 자금지원은 조건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공사비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정부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재검토 조치는 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로 이어질 수 있음.

나.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 단기적으로는 정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마하티르 총리가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정 및 성장 중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독립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신정부는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과 도출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됨.
- 신정부는 총선 개최 일주일 만에 핵심 공약인 GST 폐지를 선언하는 등 출범 이후 매우 속도감 있게 핵심 공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GST 폐지를 단행한 점은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증명함.
- 단기적으로는 여당연합 소속 정당 간 지지기반 및 경제정책 관련 철학이 상이하여 여당연합 내부에서 효율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임.
 - 여당연합 소속 4개 정당의 지지기반은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로 다양하며, 마하티르 총리는 이전 재임시절 강력한 국가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한 반면, 안와르는 시장경제 선봉자로 성향에 차이가 있음.
- 마하티르 총리는 저개발지역 집중 개발, 신규 자동차 브랜드 육성을 비롯한 제조업 중시 전략 등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신정부는 다수 인종을 구성하는 말레이계의 지지 확보를 위해 부미푸트라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나, 안와르가 총리직을 이어받은 이후에는 부미푸트라정책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순조로운 총리직 이양 및 정책적 일관성 확보, 재정·환율 등 리스크 요인 관리 및 과거 마하티르의 반금융시장적

24) 2018년 7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월 최저임금은 말레이반도의 경우 1,000링깃(약 247달러), 동말레이시아는 920링깃(약 227달러)임.

조치 부활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하티르 총리는 1925년생으로 올해 94세의 고령인바, 총선 이전에 합의된 대로 1~2년간 국정운영 후 여당연합의 실질적 수장이었던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에게 총리직을 이양할 계획임.
- 총리직 이양 이후에도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마하티르 총리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당시 해외 투기자본 배척, 자본 통제 등 경제 쇠국정책을 펼쳤으며, IMF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정부지출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함.²⁵⁾

■ [경제성장을 소폭 하락 전망] GST 폐지, 연료보조금 부활 등 조치로 소비 호조가 예상되나, 정부지출 및 고정투자 증가율 둔화에 따라 2018년에는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표 6 참고).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 증대, 공공부채 감축을 위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축소, 정부의 운영 지출 삭감 등 조치로 인해 정부지출 및 고정투자 증가율이 2018년도에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부채 경감이 핵심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추가 중단 가능성이 있음.
 - 특히 1~2년 이후 총리직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와르가 보수적 재정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포퓰리즘 공약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전자제품 수출 호황이 2017년 경제성장을 견인했으나, 2018년도에는 수요 감소, 설비시설 한계 등으로 인해 전자제품 수출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세계은행은 말레이시아가 2020~24년에 고소득국 진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²⁶⁾

표 6. 말레이시아의 실질 GDP 증가율 추이 및 주요 기관별 2018년 전망

(단위: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IMF	WB	ADB	Oxford Economics	IHS Markit
6.0	5.0	4.2	5.9	5.3 (18.4)	5.4 (18.6)	5.3 (18.4)	5.2(18.4) → 5.3(18.5)	5.5(18.4) → 5.4(18.5) → 5.1(18.6)

주: f는 전망치, () 안은 전망시기임.
자료: 각 기관별 홈페이지.

25) 박수현(2018. 5. 10), 「말레이시아 국부이자 독재자...92세 마하티르의 화려한 복귀」, 『조선일보』.

26) 2018년 7월 기준 세계은행의 고소득국 기준은 1인당 GNI 12,055달러임. 말레이시아의 1인당 GNI는 2017년 기준 9,650달러로, 고소득국 진입을 위해 1인당 GNI가 2,405달러 증가해야 함. World Bank(2018), *Malaysia Economic Monitor June 2018: Navigating Change*, p. 33.

4.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 실리에 기반한 균형 외교전략 채택, 아세안 중심성을 근간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 간 다자협력 강화 등 마하티르 총리의 대외정책 기조가 우리 신남방정책 추진 방향과 유사한바, 한국은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미·중 의존적 경제 및 외교 관계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 및 남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협력 및 아세안 중심 다자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마하티르 총리의 대외정책 기조와 유사함.
-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남중국해 영토분쟁 심화에 따라 아세안 중심성이 약화되었는데, 아세안 중심의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주도하고 아세안 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마하티르 총리의 정계 복귀로, 동아시아 역내 다자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신남방정책 본격 가동을 위해 말레이시아 협력전략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간 접점을 찾아 협력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마하티르 총리가 인적자원개발 관련 협력을 골자로 하는 동방정책을 재활성화할 예정인바, 우리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및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기반으로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 신정부가 과도한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일본 등 여타 동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 과거 서방 선진국이 아닌 동아시아 국가(한국, 일본)를 경제성장 모델로 삼은 점 등은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마하티르 총리는 2018년 6월 일본 방문 시 동방정책을 부활시켜 일본과 교육,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한국도 정상급 교류를 통해 말레이시아 동방정책 관련 협력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신남방정책도 아세안과 다층적 인적교류 확대, 장학생 및 연수생 지원 확대 등 인적교류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말레이시아 동방정책과 유사함.
- 한국은 인적자원개발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 고소득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말레이시아에 적합한 성장모델이 될 수 있음.

■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경제·외교 다변화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과 투자가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말레이시아와의 교역·투자 활성화를 통해 높은 베트남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한·아세안 교역은 한·베트남 교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교역은 최근 정체된 양상을 보임.
 - 2007~17년 한·베트남 교역은 연평균 24.5% 증가한 반면, 한·말레이시아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하는 데 그침.²⁷⁾
 - 2017년 기준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중 베트남 비중은 약 43%, 말레이시아 비중은 약 11%임.²⁸⁾

27) KITA(검색일: 2018. 7. 1).

- 2007~18년 3월 기준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중 베트남 비중은 약 34%에 달하는 반면, 말레이시아 비중은 약 9%임.²⁹⁾

■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주요 자원공급처, 건설시장, 중동진출 교두보 측면에서 중요하나, 정부는 대말레이시아 협력전략 수립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LNG, 석유 등 주요 자원 공급처로, 2017년 기준 4위 LNG 수입대상국이자 10위 석유 수입대상국임(표 7, 8 참고).
- 이슬람경제권인 말레이시아는 이슬람협력기구(OIC)³⁰⁾ 회원국으로, 중동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말레이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중동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표 7. 한국의 LNG 주요 수입국(2017년)

(단위: bcm, %)

순위	국가	수입량	비중
1	카타르	15.9	31.0
2	호주	9.6	18.7
3	오만	5.7	11.2
4	말레이시아	5.1	10.0
5	인도네시아	4.9	9.5
6	러시아	2.6	5.1
7	미국	2.7	5.3
8	브루나이	2.0	3.9
9	나이지리아	1.1	2.1
10	페루	0.5	0.9
	기타	1.3	2.5
	합계	51.3	100.0

자료: BP(201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8.

표 8. 한국의 석유 주요 수입국(2017년)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중
1	사우디아라비아	18.2	24.5
2	쿠웨이트	9.2	12.4
3	이란	7.8	10.5
4	UAE	7.5	10.1
5	이라크	6.4	8.6
6	카타르	5.7	7.6
7	러시아	5.5	7.4
8	영국	1.9	2.6
9	멕시코	1.4	1.9
10	말레이시아	1.1	1.5
	기타	9.6	12.9
	합계	74.3	100.0

주: HS code 2709(원유), 2710(원유를 제외한 석유, 역청유) 합계 수입액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7. 27).

■ 신정부 출범에 따라 소비 호조, 투명성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데, 우리 기업은 말레이시아의 할랄식품, 고급 소비재 분야 진출을 확대하고, 정부는 관련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 다음으로 소득수준이 높아 고급 소비재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큼.³¹⁾
- GST 폐지로 소비 호조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소비재 수출, 특히 할랄식품, 고급 소비재 분야를 공략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는 할랄 인증 취득 관련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경제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할랄 인증제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말레이

28) Ibid.

2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7. 1).

30)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는 1969년에 창설,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슬람 회의기구로,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가 OIC 회원국임.

31) 말레이시아의 1인당 GDP는 2017년 기준 9,892달러임. ASEAN Stats Data Portal, <https://data.aseanstats.org>(검색일: 2018. 7. 1).

시아에서 할랄 인증 취득을 통해 중동시장 진출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음.

- 전임 나집 총리 집권 당시 부정부패, 정경유착으로 비즈니스 투명성이 악화되었으나, 신정부의 대대적인 제도개혁 추진으로 비즈니스 투명성이 향상되어 우리 기업의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마히티르 신정부가 공공부채 축소를 위해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함에 따라 아세안 중 주요 건설시장인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인프라 건설수주 감소 가능성이 있으나, 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산업 설비 투자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 말레이시아는 2018년 6월 누적 기준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3위 건설시장임(한국의 대아세안 건설수주액의 13.4% 차지, 표 9 참고).³²⁾
- 한국기업의 대말레이시아 건설수주는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산업설비,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수주가 이루어진바, 말레이시아 정부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중단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그림 10 참고).
-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 부문 설비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은 관련 프로젝트 입찰 현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국영석유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와 석유화학 분야 제3국 공동진출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음.
- 페트로나스는 1974년에 설립된 종합 석유화학기업으로, 말레이시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석유화학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분야 관련 사업을 활발히 영위하고 있음.³³⁾ KISP

표 9. 한국의 동남아 국별 건설수주 실적
(1966~2018. 6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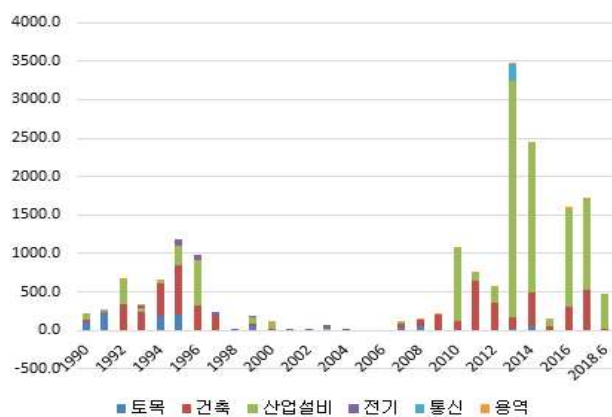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가	누적 금액	비중
1	싱가포르	41.0	27.1
2	베트남	36.6	24.2
3	말레이시아	20.2	13.4
4	인도네시아	17.2	11.4
5	필리핀	15.3	10.1
6	태국	14.6	9.7
7	미얀마	2.2	1.4
8	라오스	2.0	1.3
9	캄보디아	1.9	1.3
	동남아 합계	151.1	100.0

주: 브루나이 건설통계는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음.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 2018. 7. 16).

그림 10. 한국의 공종별 대말레이시아 건설수주 추이
(1990~2018. 6)

(단위: 백만 달러)



주: 2018년은 1~6월 수주금액임.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 2018. 7. 16).

32)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 2018. 7. 16).

33) Petronas 홈페이지, <http://www.petronas.com.my>(검색일: 2018. 7. 1).

[부록]

부록 표. 신정부 장기추진 60대 공약

5대 분야	번호	주요 내용
민생 부담 경감	1	GST 폐지, SST 부활
	2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물가 상승 압력 완화
	3	사회보장프로그램 개선 등 통한 보다 공평한 부의 분배
	4	적정 가격으로 구매 및 임대할 수 있는 주택 증대
	5	주택 우선 공급, 첫 차 구매 시 세제혜택 제공 등 통해 청년층의 부담 경감
	6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계약 재검토를 통해 일부 기업의 이익 독점 방지
	7	125cc 미만 오토바이와 1300cc 미만 차량 소유주 대상 연료보조금 지급
	8	도시 외곽 및 농촌의 대중교통 확충, 신기술 통해 교통수단의 질 향상
	9	보건부 예산 확대 및 저소득층 의료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개선
	10	농업 부문 종사자 후생 증대 및 식량안보정책 재편을 통한 국민의 기초식량 보장
제도 및 정치 개혁	11	국왕의 고견 존중 등을 통해 말레이계와 밀레이 전통의 존엄성 회복
	12	총리의 임기·다중 보직수행 제한 및 총리실 예산·인력 감축
	13	1MDB, FELDA, MARA, Tabung Haji 등 비리 연루 기관 조사
	14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 개편 및 반부패 노력 확대
	15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분리를 통해 역할 충돌 방지
	16	제도개선 통한 국회 존엄성 회복
	17	선거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 제도의 투명성 제고
	18	신규 정치자금규제법 제정 등을 통해 깨끗한 정치 자금조달 시스템 구축
	19	총리의 판사임용 권한을 없애는 등 제도개선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 신뢰 회복
	20	재정지원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존경받는 군대 및 경찰 조성
	21	실력 기반 승진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
	22	정부연관기업 거버넌스 향상
	23	정부조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부조달 부문 세금 낭비 방지
	24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연방제 정신 부활
	25	지방정부의 역할 및 권한 강화
	26	인권위원회(SUHAKAM) 창설 및 이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권 실현
	27	민주주의에 방해가 되는 ‘형법 1997(Penal Code 1997)’과 같은 각종 탄압적인 법률(oppressive laws) 폐지
	28	젊은 세대를 탄압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29	예산 관련 투명성, 진실성 제고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경제성장	30	보다 견고한 경제발전을 위해 부미푸트라 및 전 국민의 경제성장 지원
	31	사업 및 무역절차 간소화, EU 등 국가와 양자협상을 통해 신규 시장 진출 확대, 투자 활성화

5대 분야	번호	주요 내용
촉진	32	서민 및 중소기업 기업가를 위한 조세 시스템 도입
	33	차별적 관행 철폐를 위해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y Commission) 창설
	34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통해 다수의 소득 증대
	35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 존엄성 향상
	36	가정주부의 복지를 위한 근로자공제기금(EPF: Employees Provident Fund) 실행
	37	'국가신탁기금법 1988'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장기적 번영 보장
	38	원주민(orang Asal)의 권익 확대
	39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균형 유지
사바주(州) 및 사라왁주(州)의 '1963 말레이시아 협정'에 따른 상태로 귀환	40	'1963 말레이시아 협정'의 이행을 위한 감독각료위원회 설립, 협정 이행
	41	사바주(州) 및 사라왁주(州) 경제성장 통해 주민 번영 보장
	42	사바주(州) 및 사라왁주(州) 청년 일자리 창출
	43	사바주(州) 및 사라왁주(州)를 화합사회의 모델로 조성
	44	사바주(州) 및 사라왁주(州) 교육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45	전력공급 확대, 출생신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및 외곽지역 주민 권익 향상
	46	불법이민자 신분증 부여 문제의 공정한 해결책 마련 등 사바주(州) 자주권 및 안보 확보
	47	사바주(州) 및 사라왁주(州) 세금배분 확대 등 통해 지방분권 강화
48	제도적 보안을 통해 사바주(州) 및 사라왁주(州) 주민의 관습법적 토지 권리 보장	
포용적이며,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말레이시아	49	민음학교 모델(Trust School Model) 개선 등을 통해 국영학교를 최고의 선택지로 조성
	50	'대학교 법령 1971' 철폐 등을 통해 국립대 및 교육기관의 독립성, 권위 회복
	51	특수교육 예산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권익 향상
	52	경찰청 예산 확대, 관련 부처 간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범죄 및 사회병폐 축소 노력
	53	친밀한 가족제도와 종교, 인종 및 배경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는 이웃관계 보전
	54	사회단체, 시민사회 및 사회적 기업가 권한 확대
	55	청년 행동주의(Youth activism) 자유보장 등 관련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활동 촉진 지원
	56	국민화합을 위한 국가화합자문위원회 설립
	57	부패가 아닌 청렴함으로 유명한 말레이시아 조성
	58	말레이시아 해양경찰청의 역량 및 재원 확대 등 국경보호 노력 증대
	59	미얀마 로힝야(Rohingya) 및 팔레스타인 사태 해결 노력
	60	이슬람 협력기구(OIC), 아세안 등 국제사회에서 말레이시아의 역할 확대

자료: PH(2018), *Buku Harapan: Rebuilding Our Nation Fulfilling Our Hopes*, pp. 1-123.